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로 법정선다

검찰, 양승태 전대법원장 구속상태로 기소
강제징용 재판개입 및 인사불이익 등 혐의
박병대·고영한 불구속 기소…임종헌 추가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8개월 수사 마무리
추후 연루 판사들 기소여부 결정 비위통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불명예를 또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1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꼭 한 달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약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범주를 나눠 공소장을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 등을 상대로 상고법원 도입 및 해외 법관 파견 등 조직의 이익을 얻고자 재판 개입을 계획 및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및 전원합의체 회부 등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주심 대법관에게 원고 청구 기각 의견을 전달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2017년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이용해 헌재 평의 등 진행경과와 소장·재판관들 동향 등 중요정보 325건을 수집해 보고·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일선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을 취소 및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사법행정이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판사들의 의견표명을 억압하고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2013~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해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2012~2017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이들을 중심으로 최선호 희망지에서 배제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및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 및 축소하고, 수사기밀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영장재판에 개입을 시도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첫 검찰 조사부터 구속된 이후까지 '실무진들이 한 일'이라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며 법정다툼을 이미 예고했다.

검찰도 최고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영장이 재청구됐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진행상황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지휘부'인 이들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여간 진행해온 수사를 일단락할 전망이다.

또 이달 내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재판에 넘기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재판 개입 및 청탁 의혹에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의 기소 여부도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피고인 양승태' 재판 누가 맡나…법원은 고민 또 고민

'사법 농단'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할지 주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하고 배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는 전직 사법부 수장을 피고인석에 앉혀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어느 재판부가 심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원은 원칙적으로 연고 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으로 사건을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 인사 이동과 사무분담이 예정된 재판부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이 배당된 뒤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맞춤형 재판부를 꾸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35·36부 중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재판부 3곳을 증설한 바 있다. 신설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기존 재판부보다 사건 부담이 적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직접적인 연고 관계도 없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 등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5명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께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관련 기록 열람 등사 및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사건도 기소 후 26일이 지나서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겹치는 공소사실이 많아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으로 나뉘었다가 양 전 대법원장으로 다시 합쳐지는 모양새로 파악했다.

반면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한 재판부가 과도한 업무량을 부담하게 돼 병합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한 사람의 혐의만 수만쪽인데 두 사건을 같이 담당하면 업무량이 부담되기 때문에 (병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시 추가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은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았지만, 임 전 차장이 판사 후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며 조만간 첫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